중복·재탕에 민자 의존한 '장밋빛 청사진'

전남 시·군 개발사업 투융자심사 왜 줄줄이 탈락하나

초기 투입 예산 많고 유지비 필요한 테마파크·관광지 개발 집중

사업화 능력도 부족…재정력 감안한 국고지원 등 제도 보완 시급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중앙 및 전남도 투·융자심사 의뢰사업을 분석해보면 재정력이 취약한 22개 시·군이 대규모 자체 예산이 투입되거나 향후 유지·관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테마파크 및 유휴지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재검토나 보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민자유치를 내걸며 재상정해 조건부로 간신히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 유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특색 있는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고, 재정력을 감안해 국고 비중을 결정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 투융자심사 적정 4건 모두 하수시설=목포시가 지난 7월 열린 제2차 지방재정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제출한 안건은 서산·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마리나항만 조성사업(1단계) 등으로 각각 1090억원(국비 545억원, 시비 545억원), 406억원(국비 203억원, 시비 203억원)의 거액이 투입돼야 한다. 재원조달계획 마련, 시설 축소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158억원 규모(국비 68억원, 시비 90억원)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사업, 100억원 규모(국비 30억원, 군비 26억원 등)로 해남군이 제출한 2015년 무·배추 출하 조절시설 지원사업, 400억원(국비 280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80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광군의 디자인 융합 마이크로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도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사업 규모가 큰데다 해당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날 심사 대상 사업 10건 중 재검토가 6건으로, 적정이나 조건부는 모두 당연히 설치해야 할 하수기반시설만 해당됐다.

지난 4월의 제1차 심사에서도 유사했다. 170억원(국비 53억원, 민자 109억원 등) 규모의 곡성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역시 민자유치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은 조건부로 통과하기는 했으나 전체 사업비 162억원 가운데 137억원을 재정이 열악한 무안군이 부담하도록 해 군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처럼 기반시설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경우 재검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정부부처가 공모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잦아 전남지역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군의 재정력은 갈수록 취약해지는데 국비 비중은 되레 줄어들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사업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빈익빈'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22개 시·군이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부부처와 국비 지원액을 놓고 마찰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남도 재검토 판정 뒤 두 달만에 조건부 통과=규모가 작은 시·군 신규사업은 전남도가 투·융자 심사를 맡고 있다. 올 들어 두 차례 심사대상이 된 54건의 사업 가운데 적정은 21건, 조건부 20건, 재검토 11건, 반려 및 부적정 2건 등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제는 재검토 대상이었던 사업이 다음 심사에서는 조건부로 바뀌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50억원(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규모의 강진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150억원(국비 90억원, 군비 60억원)이 드는 곡성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시설 운영방법을 고려한 추정손익 검토, 효율적인 관리·운영 주체 및 방법 수립 등을 이유로 재검토 대상이었다가 두 달 뒤인 지난 6월 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을 받았다.

시·군의 사업이 지나치게 관광시설 확충에만 치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안군은 80억원(국비 40억원, 군비 40억원)을 들여 해저유물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인근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무안군은 26억원(국비 10억원, 군비 16억원)을 들여 호담 항공우주전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다가 재검토 의견을 통보받았다.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의 경우 지역자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받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우 상호 연계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사업화 능력이 떨어져 난감하다"며 "평가만 내세우기보다는 지원·배려를 통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중앙부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와 전남도의 제3차 투·융자 심사 결과는 다음달 초 통보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가 2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과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튜닝밸리 자문단과 기념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정순남 목포대 교수,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이낙연 전남지사, 한범석 자동차부품연구원 사업개발 본부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 삼포자동차튜닝밸리에 100여개 부품업체 유치

F1경주장 인근 99만여㎡ 조성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업무협약

전남도가 영암 삼호읍 기업도시 삼포지구의 F1경주장 주변 부지 99만여㎡(30만평·1단계 4만평)를 활용해 튜닝 및 고성능 차부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 자동차 튜닝부품 업체 100여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도가 이날 발표한 조성 계획에 따르면 F1경주장과 연계해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기능이 집적화된 독일,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튜닝 및 고성능 차부품 업체들의 입주를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주요 인프라는 ▲국내 유일의 국제공인 1등급 F1경주장의 테스트 베드 제공(2010년 개장) ▲고성능 자동차 핵심기술 연구개발센터 건립(2015년 완공) ▲튜닝기업 지원동 및 장비고 건립(2016년 완공) ▲시험·평가, 인증장비 29종 구축(2017년 완료) ▲시험·평가법 15종 개발 및 연구개발(R&D) 5개 과제 수행(2018년 완료)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같은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등에 해당 인프라 구축 예산을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총 예산 1770억원 가운데 올해까지 72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68억원이 계상돼 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F1경주장과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오는 2020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세우고,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담팀을 상시 가동하는 한편 경제부지사를 지낸 정순남 목포대 교수를 비롯한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15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

2014~2018 광주·전남 지역 대표 육성산업

29일 발표된 '2014~2018 지역산업발전계획(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수립되는 제2차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는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주·전남의 지역 대표산업 육성계획을 살펴봤다.

■ 광주시

생활가전·금형·의료부품 집중

생산액 13조2000억원 늘린다

■ 전남도

금속·고분자·에너지 전략산업

강소기업 300개 키워 일자리 창출

◇광주시, 향후 5년간 생산액 13조2000억원 증가 목표=광주시는 2018년까지 주력사업으로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해 현재 22조1000억원 수준의 생산액을 35조3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중대형 프리미엄 생활가전과 미용 및 건강 추구형 가전, 미래형 가사로봇 산업 등 스마트 가전 분야를 집중 육성·지원해 국내 1위 프리미엄 스마트가전 수출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4조9000억원에 머물고 있는 생산액이 7조3000억원으로 높아지고, 관련 일자리도 1000개 정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광주의 강점인 금형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합박판 성형금형, 복합사출 성형금형 분야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5년 후면 금형산업에서만 1조4000억원의 생산액과 5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체의료소재부품도 광주만의 주력산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미 국내 생체의료용 소재와 부품생산 도시를 선점하고 있는 광주는 생체의료용 금속소재·부품, 세라믹소재·부품, 고분자 소재 등을 기업화·규모화해 대규모로 생산하는 생산공정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한 금속절삭가공기계 등 초정밀 생산가공시스템을 육성해 아시아 3대 생산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브랜드 디자인 및 디자인 융합 특화도시를 목표로 R&D 지원 중심의 디자인 기업 매출액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소기업 300개 육성…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전남은 '강소기업 300개 육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을 발전비전으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에 따르면 전남은 제조업에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가운데 소형 조선과 블록공정에 강점이 있으며,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충남, 울산과 함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광주, 제주, 강원, 경남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았고,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전남의 전략산업은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등 4개로 선정됐다. 과제 단위에서 제조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비R&D(연구개발)와 R&D를 발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방침이다. 조기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게 된다.

14개 시·도 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6개의 경제협력권 산업인 협력산업은 바이오 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 등이 꼽혔다.

또 지역생활권 및 시·군·구가 발굴한 특화자원을 토대로, 3개 이내의 품목을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연고(전통)산업은 고품질 타월, 산수유, 다시마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산업은 시험·인증, 공정개선, 특허, 창업, 마케팅·유통, 컨설팅, 수출 등에 있어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이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